

## 영등포구, 공영주차장 '구민 우선 전산주첨제' 확대 시행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관내 공영노외주차장 7개소에 대한 정기권 신청을 '선착순 순환배정제'에서 '구민 우선 전산주첨제'로 변경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인 공영노외주차장 7개소는 ▲영등포구청 환승역 ▲영등포구청 별관 ▲도립동 ▲문화동 ▲신길4동 ▲신길5동 ▲양평유수지(대형)로 구는 해당 주차장을 21년 7월부터 선착순 순환배정제'로 운영해왔다.

기준 '선착순 순환배정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주차면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구민과 타 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구 예산으로 운영되

는 공영주차장이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에 시작되는 정기권 신청을 '구민 우선 전산주첨제'로 변경해 시행한다.

'구민 우선 전산주첨제'는 매년 전산 주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물량의 90%를 구민에게 배정해 지역 주민의 이용 기회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배정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차 주첨에서는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면 수만

큼 우선 배정하고, 2차 주첨에서 일반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민 90%, 타 지역 거주자(상근자 포함) 10% 비율로 배정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월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기존 월정기 이용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하며, 주차장별 차량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가능 주차장 7개소 현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차문화과 또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입학 전 꼭 확인하세요!"…구로구,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점검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2026년 초·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완료를 당부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아동·청소년은 감염병 전파에 취약해 입학 전 접종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특히 만 4세 이후 추가 접종률은 영유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입학생(2019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자)은 만 4~6세에 추가 접

종하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폴리오 4차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4차 또는 2차) 등 4종을 확인해야 한다.

중학교 입학생(2013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자)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6차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1차(여아 대상) △일본뇌염(5차 또는 2차) 등 3종의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go.kr) 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전국 지정의

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되며, 접종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폐업 의료기관이나 국외 접종자의 경우 보건소에 별도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구로구 건강증진과(02-860-2432, 3361)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해 주시길 바란다"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금천구, 설 장바구니 부담 낮춘다... 물가안정 대책 추진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설 명절을 맞아 개인서비스요금 및 설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약 29만 6,500원, 대형마트 40만 6,880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각각 1.98%, 0.64% 감소한 수치다.

다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구는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2월 2일부터 21일까지 설 대비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바지자요금 등 부당 요금 신고를 접수하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평일 18시 이후와 휴일, 설 연휴 기간에는 종합상황실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설 성수

품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품목은 농산물(무, 배추, 사과, 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닭고기), 수산물(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마른멸치), 임산물(밤, 대추) 등 성수품 16개 품목이다. 구는 가격 급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금천구청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율리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및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 ◆ 대상: 초3~고3 학생 및 동일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 내용: 인성, 문화예술, 체육, 생태·환경, 진로, 인문·사회, 수리·융합과학, AI·디지털 등
- ◆ 방법: 경기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 경기공유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 운영되며 신청기간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 3월부터 지역별로 본격적인 모집이 시작됩니다.

자율 교육 미래 경기도 교육청

승마/드론 반도체 경전철 타고~

##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대상지 10곳 추가 선정

2단계 대상지로 강북·서남권 10곳 선정…지역 맞춤형 고지대 이동편의시설 설치

오 시장, 12일(목) 서대문구 설치 예정지 찾아 세밀한 설계와 조속한 설치 당부

2단계 대상지 연내 설계 착수 목표…1단계 5곳,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착공



대상지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수직 협·경사형·복합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초등학교·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고,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이동약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시설'로 조성한다.

시는 2단계 대상지 10곳에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연내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선정된 1단계 대상지 5곳은 설계를 마무리하는 대로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구릉지가 많은 강북권·서남권 지역의 고지대에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주민 이동 편의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지대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민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대상지를 지속 발굴해 향후 최종 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번 2단계 10개소 선정은 불편을 겪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구도구 계단과 경사 때에 일상의 기회를 잊지 않도록 시민 체감과 안전을 기준으로 대상지를 지속 확대해 이동이 편리한 도시, 기회가 열리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조합원 피해 예방 강화

조합원 모집·설립 인가 후 단계 114곳 대상, 연중 2회 시·구·전문가 합동조사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회계·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외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 신설, 회계자료 서식 및 사전 준비자료 추가 등

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피해상담 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2 청사 6층)는 매주 화·수요일 13~17시 변호사가 대면 또는 전화상담(☎02-2138-9201~2)으로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총 615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회계처리 부적정, 정보공개 미흡, 용역계약 부적정 등 20개 분야의 지적항목에 대해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149건, 과태료 부과 46건, 시정명령 76건, 행정지도 344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은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마련,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해 조합의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 설 성수식품 1,753개소 점검 완료…시민 안심 구매 환경 조성

선물용·제수용으로 시민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로 불법식품 유통 사전 차단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설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명절 기간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생 상태와 표시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한과, 떡, 만두, 축산물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흥삼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총 1,75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우선 선정했으며, 식품제조판매업소 677개소, 축산물가공·판매업소 1,076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추진했으며,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병행해 점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육우 혹은 수입산 쇠고기의 한우 등급 판매 등이다.

시는 위생점검과 함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명절 다소비 식품 620건을 수거하고, 전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총 27곳의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현재 검사 중인 수거식품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확인될 경우 회수·폐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장성 기자